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 인문계열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사회보장, 복지정책, 기본소득, 사회권, 소득재분배	
예상 소요 시간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역량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입장 선택에 관한 것이다. 글 자료는 선택의 합리성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도록 공유재에 대한 공동 권리,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과 보상, 소비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사회권, 노동에 의한 사적 재산권의 정당성, 근로의욕 약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와 관련된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글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데이터 자료는 가상의 국가인 '갑(甲)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복지정책안을 정책 시행 5년 후의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세 종류의 데이터를 제시한 후 성과가 우수한 정책안을 선택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p>■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p> <p>■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p>		
	<p>■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p> <p>■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p>		
	<p>■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p> <p>■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p>		
	<p>□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p> <p>□ 한국사</p>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가) ~ (사)	성취기준 1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10국03-04] 쓰기맥락을 고려하여 쓰기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가) ~ (사)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가) ~ (사)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가)~(사)	성취기준 1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문제, (바)	성취기준 1	[12생윤03-01] 직업의 의의를 행복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직업윤리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동체 발전을 위한 청렴한 삶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2	[12생윤03-02]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대 정책과 이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분배 정의 이론을 통해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으며, 사형 제도를 교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문제, (라)	성취기준 1	[12윤사04-03]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성취기준 2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문제, (가)~(사)	성취기준 1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성취기준 2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성취기준 3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경제
(가), (라), (바), (사)	성취기준 1	[12경제01-04] 가게,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정치와 법
(다)	성취기준 1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논제, (나)	성취기준 1	[12사문04-04] 사회 복지의 의미를 설명하고 복지 제도의 유형과 역할 및 한계를 분석한다.
	성취기준 2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8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18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18	164-207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19	112-121,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30-179	공통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63	공통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9	154-171	공통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80-81	(바)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80-81	(바)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8	86-87	(바)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19	174, 198	(라)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188-189	(라)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85	논제, (가)~(사)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30	논제, (가)~(사)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48	논제, (가)~(사)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5, 28	(가)~(사)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03, 140	(가)~(사)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48	(가)~(사)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18	(다)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96, 105	(다)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01, 108	(다)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9	32-41	(가), (사), (마)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34-44	(가), (사), (마)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8	23	(라)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26, 129	(라), (바)	○
경제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9	122	(바)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36-42	(가), (사), (마)	○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18	30	(다)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8	34	(다)	○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161	(나)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153	(나)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통치론	존 로크 (강정인 외 역)	까치글방	2017	5장	(라)	○
거대한 불평등,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순희 역)	열린 책들	2015	163-173	(마)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19	174, 198	(라)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188-189	(라)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9	32-41	(마)	○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9	34-44	(마)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36-42	(마)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통합사회』,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자신

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예상되는 반론 및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 찬성 논거를 위한 제시문으로 공유재에 대한 공동 권리[제시문 (가)],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과 보상 [제시문 (나)], 소비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제시문 (마)] 지문이 제시되었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 제시문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사회권[제시문 (다)], 노동에 의한 사적 재산권의 정당성[제시문 (라)], 근로의욕 약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제시문 (바)] 지문이 제시되었다.

[문항 2]는 제시문 (사)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가상의 국가인 갑(甲)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복지정책안 4가지를 제시하고 표와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을 두 개 선택하고, 두 안 중 하나를 골라 [문항 1]에서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제시문 (가)는 알래스카 주 의회에서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설립하고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배당금을 분배하는 사례를 통해 천연자원 등 공유재의 개발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하도록 하는 글 자료다. 제시문에서는 공유재는 구성원 모두가 권리가 있으며 그 개발소득도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공유재는 천연자원만이 아니라 사회가 집단으로 참여하는 인프라와 지식기반, 사회적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도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제시문에서는 천연자연과 인공적인 공유재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공유재를 활용한 경제활동의 수익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공유재 수익의 정당한 분배 방식으로써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공동체의 존속에 매우 필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노동은 가사노동처럼 주로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기에 오랫동안 공적인 평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유지에 중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노동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보상을 통해 삶의 만족감이 높아져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지다. 이런 논지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무보수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논거로 쓸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의 이론적 근간이 되는 사회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권은 과거 물질적 궁핍에서 벗어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위험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적극적 의미로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권의 실현은 예산과 직결되기에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부족하므로 이들의 사회권은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받고 있다. 이는 복지란 사회적 약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기에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로크의 소유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사적 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사고하도록 하는 글 자료다. 로크는 사적 소유란 그 소유물이 개인의 신체를 이용한 노동의 결과물로서, 신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처럼 그것이 산출한 성과물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러한 사적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에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한 가치생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사회전체의 자산도 증식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에 근거한 사적 소유, 즉 재산권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재산이 정당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제시문은 노동에 근거하지 않고 소득을 부여하는 것은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정하지 못하고, 또 인간사회에서 노동이 지니는 가치를 약화시켜 사회전체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산업구조에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포드 2세의 일화를 통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경우 전반적으로 소비가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소비는 시장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주요 원천 중 하나이기에 소비자가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바)는 일본에서 새로 만들어진 조어 '프리타'의 의미를 통해 청년세대의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를 다룬 글 자료다. 본 지문은 거품경제 시절에 등장한 프리타를 개인보다는 조직을 중시해온 일본의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세대의 저항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노동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이런 태도가 거품경제 이후에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감소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노동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반대 논거로 쓸 수 있다.

제시문 (사)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기본소득 제도와 기존 사회 복지 제도의 장단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통계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복지정책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각 자료에 제시된 수치와 도표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복지행정의 효율성, 소득불평등 상태 등의 차이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료 1>은 네 가지 복지정책안의 특징을 제시한다.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 공공 부조 등 기존 복지정책과의 예산배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안이 도출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제시된 네 가지 정책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자료 2>는 각 복지정책안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변화를 나타낸다. <자료 2>의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국가의 노동공급 규모를 판단하는데 활용됨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 2>는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과거 시점에서 미래 시점으로 변화)를 도표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수치 중 어떤 것이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탈을 나타내는 것인지, 어떤 것이 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안의 특징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탈 유인, 반대로 경제활동인구로의 유입 유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자료 3>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의 수급이나 적격자의 미수급과 같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료에 제시된 4분면 중 이와 같은 행정 비효율을 나타내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별이 필요한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행정착오나 신청자의 기망으로 인한 부정 수급, 낙인효과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자발적 미수급, 정책 미비나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반면 무조건적,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는 이러한 복지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자료 4>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먼저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복지 정책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적 이전지출과 공적 이전소득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사용해야 함을 이해한다. <자료 4>는 도표 자료로부터 고소득층(5분위)과 저소득층(1분위)의 평균소득 변화와 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정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기준

평가항목	채점기준		배점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의 정당화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15점)	주장 1(찬성) 선택의 정당화	주장 2 (반대) 선택의 정당화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공유재에 대한 공동의 권리(5점) - (나)의 논거: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와 보상(5점) - (마)의 논거: 소비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논거: 한정된 재정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5점) - (라)의 논거: 무노동 보수의 부당함과 노동을 통한 사회적 부의 창출(5점) - (바)의 논거: 근로의욕 약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5점)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제시문 (가)~(바)를 활용한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한 반론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15점)	주장 1(찬성)에 대한 반론	주장 2(반대)에 대한 반론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논거: 한정된 재정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5점) - (라)의 논거: 무노동 보수의 부당함과 노동을 통한 사회적 부의 창출(5점) - (바)의 논거: 근로의욕 약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공유재에 대한 공동의 권리(5점) - (나)의 논거: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와 보상(5점) - (마)의 논거: 소비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창출(5점)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반론에 제기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 논리			
제시문 (가)~(바)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한 재반박 (15점)	주장 1(찬성)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주장 2(반대) 선택 재반박 논리(예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의 논거 재반박: 행정적 낭비와 낙인효과(5점) - (라)의 논거 재반박: 무한한 이윤추구로 인한 지구 생태계 위협(5점) - (바)의 논거 재반박: 자기 주도적 삶 추구(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의 논거 재반박: 공유재에 대한 지분 평가의 어려움과 불공정성(5점) - (나)의 논거 재반박: 무보수 노동을 위한 일률적 보상은 사회적 낭비, 인식 개선과 복지 효율화를 통해 보상 가능(5점) - (마)의 논거 재반박: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기본소득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지 않음(5점) 	
글의 논리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때 사용했던 논거를 단순 반복할 경우 감점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점수			60점

[문항 2] 채점기준

평가항목	채점기준	배점				
<p>제시문 (가)의 <자료 2>~ <자료 4> 해석</p>	<p>■ <자료 2> 해석 (10점) ▷ 수치 해석(9점): A와 B는 C와 D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비중은 낮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비중은 높음 ▷ 의미 해석(1점): 산업구조와 노동수요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C와 D는 노동유인이 감소하여 노동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음</p> <p>■ <자료 3> 해석 (10점) ▷ 수치 해석(9점): C와 D는 A와 B보다 부적격자의 수급률과 적격자의 비수급률이 더 낮음 ▷ 의미 해석(1점): A와 B는 선별적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부정 수급과 낙인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p>■ <자료 4> 해석 (10점) ▷ 그림 해석(9점): B와 C는 A와 D보다 1분위 평균소득과 5분위 평균소득 격차가 적어 소득불평등 정도가 적음 ▷ 의미 해석(1점): 복지예산이 늘어난 B, C에서 고소득층의 공적 이전지출이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이 줄고 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이 높아짐</p>	<p>30점</p>				
<p>정책 선택에 대한 논증</p>	<p>■ 성과가 우수한 정책안의 선택 (5점) ▷ <자료 2>~<자료 4>의 해석을 통한 선택: B, C안 ※ 정책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본 평가항목의 점수(5점) 없음</p> <p>■ 자신의 주장에 맞는 C안(주장 1) 혹은 B안(주장 2) 선택과 정당화 (5점)</p> <table border="1" data-bbox="277 1263 1310 1518"> <thead> <tr> <th data-bbox="277 1263 804 1352">주장 1: C안 선택의 논리(예시)</th> <th data-bbox="804 1263 1310 1352">주장 2: B안 선택의 논리(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1352 804 1518"> - <자료 2>에서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될 경우 문제 없음 </td> <td data-bbox="804 1352 1310 1518"> - <자료 3>에서 복지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복지수급 감시 강화, 선별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 가능 </td> </tr> </tbody> </table> <p>※ 정책의 선택이 잘못된 경우, 본 평가항목의 점수(5점) 없음 ※ 정당화의 논거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차등 부여</p>	주장 1: C안 선택의 논리(예시)	주장 2: B안 선택의 논리(예시)	- <자료 2>에서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될 경우 문제 없음	- <자료 3>에서 복지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복지수급 감시 강화, 선별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 가능	<p>10점</p>
주장 1: C안 선택의 논리(예시)	주장 2: B안 선택의 논리(예시)					
- <자료 2>에서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4차산업혁명으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될 경우 문제 없음	- <자료 3>에서 복지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복지수급 감시 강화, 선별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 가능					
<p>점수</p>		<p>40점</p>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5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50자 - 489자	10점 감점(-)
	490자 - 629자	5점 감점(-)
	630자 - 770자	감점 없음
	770자 초과	5점 감점(-)

(-)10점까지

7. 예시 답안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 주장 1(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찬성)을 택한 경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 먼저 사회의 부는 노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유적 성격이 강한 사회 인프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그리고 천연자원 등을 이용해서도 생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공유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에게 공동의 권리가 있다. 또한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존속에 필요하지만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의미도 지닌다. 기본소득은 이런 사회활동의 가치를 향상시켜 삶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시장 참여를 복돋울 수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누구든지 소비자로서의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천연자원이라도 일단 노동이 가해져 경제적 가치가 생산된다면 더 이상 공유재로 간주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개인의 노동은 사적인 것이기에 그 노동의 결과로 생산된 것에 대해서도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이나 질병처럼 돌봄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국가 예산 안에서 이런 사회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약자들에게 재정이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끝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데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근로의욕이 약해져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그렇지만 자원의 유한성을 생각할 때 노동의 투입만으로 사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남용은 무한한 이윤추구로 이어져 하나뿐인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권을 우선 배분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대상을 선정하는 행정적 낭비뿐 아니라 대상자가 느낄 사회적 낙인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끝으로 기본소득으로 노동의욕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고용구조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신만의 주도적인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본소득 제도가 야기할 문제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될 가치가 더 큼으로 도입에 찬성한다.

(원고지 기준 1,029자)

■ 주장 2(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를 택한 경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먼저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지원하기보다 사회적 보호가 꼭 필요한 약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둘째, 정당한 재산권은 자기의 노동을 기반으로 있다. 노동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이러한 정당한 재산권의 개념에 어긋나 노동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사적 소유권에 의해 추동되는 사회적 부의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프리타'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유인을 약화시켜 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부는 직접적인 노동만이 아니라 공유재 성격을 지닌 사회 인프라,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천연자원 등을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 그 수익 중 일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동화에 의해 고용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총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존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을 보상하고, 그러한 노동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공유재의 사회적 부에 대한 기여와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지분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약화시킬 수 있어 불공정하다. 또한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일부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해도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전체 고용과 총수요 역시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지급된 기본소득이 전적으로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을 보상하고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며 복지항목의 세부적 설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는 그 효용보다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도입에 반대한다.

(원고지 기준 1,043자)

■ C안을 택한 경우

주어진 자료에서 성과가 우수한 두 안은 B, C안이다. 먼저 <자료 2>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한 C, D안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다 5년 후 그만두는 인구의 비중은 A, B안에 비해 높아지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5년 후 하게 되는 인구의 비중은 낮아졌다. 산업구조와 노동 수요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C, D안은 노동 유인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자료 3>에서 2사분면은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정 수급한 경우, 4사분면은 자격이 있는 자가 수급하지 않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나타낸다. A, B안은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가 가진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C, D안보다 부정 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료 4>에서는 복지규모 확대를 통해 부유층의 공적 이전지출이 늘고 빈곤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높아진 B, C안에서, 5분위와 1분위의 평균소득 간 차이가 A, D안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B, C안이 A, D안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정책성고가 우수한 두 안은 B, C안이고 이 중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안은 C안이다. C안의 경우 비록 <자료 2>에서 노동공급 부족이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가정에서 나온 결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노동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더라도 노동공급이 부족해지지 않을 것이다.

(원고지 기준 696자)

■ B안을 택한 경우

정책효과가 우수한 안은 B안과 C안이다. <자료 2>에서 A와 B안은 나머지 두 안에 비하여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비율이 6.5%와 6.8%로 낮고, 그 반대의 경우는 높다. 이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 C와 D안은 노동유인을 감소시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3>에서 D와 C안은 나머지 두 안에 비해 부정 수급과 적격자의 비수급 비율이 낮다. 이는 A와 B안은 소득조사 등 복잡한 선별과정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료 4>를 보면 B와 C안은 예산을 확대하는 안으로 세율증가 등으로 고소득층의 공적 이전지출이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이 낮아지며, 저소득층은 복지예산 증가나 기본소득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 처분가능소득이 높아졌다. 이는 B와 C안은 나머지 안에 비해 5분위와 1분위 간 소득격차를 감소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B와 C안의 정책성고가 나머지 안들에 비해 더 우수하다. 이 중 B안은 복지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복지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복지정책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유인 약화를 막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B안은 이 두 기준에서 모두 우수하므로 기존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원고지 기준 681자)